

남성숙 칼럼



본사 사장

당신이 5·18이었다

만, 광주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다. 전국에서 광주 학살의 상황을 알리고자 수많은 이들이 함께 싸웠고 광주와 함께 피눈물과 울분을 쏟아냈던 시간이었다.

1980년 이후, 대한민국의 저항과 투쟁은 다시 새롭게 시작됐다. 전국에서 5·18의 진상을 알리고 진실을 규명하여 책임자 처단을 요구하였으며,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신군부집단 타도를 외치며 들불 같은 싸움들이 번져나갔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10년 저항으로 광주 5·18은 전국의 5·18이 되었고, 대한민국 모두의 5·18이 됐다.

그런데, 진실을 왜곡한 군사반란 세력이 지역주의와 반공 프레임으로 우리 교육세력이 이어받아 진실규명을 살아온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해달라'는 기념사에 화답하듯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9일 '전국의 5·18들-5·18의 현재와 정신계승'을 주제로 광주정신포럼을 개최하였다.

5·18의 진실을 알리려고 80년대를 치열하게 살다 숨겨진 사람들, 숨죽여 지켜보며 무언의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 시대의 상처에 아파하고 흐느끼며 살았던 사람들을 조명했다.

모래가 5·18민주화운동 39주기가 다. 1980년 그날은, 광주에서 벌어진 신군부 세력의 권력찬탈을 위한 쿠데타였고, 그 내란모습을 관철시키기 위한 계획적 조직적 학살이었다. 당시 1980년 5월 광주의 저항과 투쟁은 고립되었고, 권력을 찬탈하고자 하는 군부의 총질에 스러졌지

백 세상에 진실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갈아선 내년 40주년에도 조사 위가 꾸러질지 모르겠다. 최근 미정보요원 출신 김용장씨는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군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을 했다. 지난해엔 전두환씨가 옛 전남도청 제 2인인 박정호에게 두 차례 참석해 사실상 작전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 군 기록물이 공개됐고, 최근엔 전씨가 광주비행장에 다년간 직후 첫 집단발포가 이뤄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앞서 국방부 과거사위가 기무사에서 찾은 육군 제2군사령부의 '광주권 총정작전 간군 지시 및 조치 사항'에 '전(全) 각하(閣下) : 초병에 대해 난동 시에 군인복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명시돼 있는 점도 사실상 전씨가 자위권 발동 명목으로 발포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진상조사위가 빨리 꾸러져 광주항쟁의 정점에 있는 전두환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해야 한다.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해 2월 여야합의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후 무엇을 했는가. 여야가 싸우는 사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39주기를 맞고 있다.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을 골자토 하고 있는 '5·18 왜곡 처벌법안'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39주기 기념식까지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 전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사날을 맞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39년이 지나도록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미완으로 남아있다. 헬기 기총사격 여부,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 보안사의 5·18 왜곡 및 조작 경위, 계엄군 성폭행, 학살 은폐 의혹까지 밝혀내야 할 진실이 너무 많다.

이제 광주도 더는 물러설 수 없다. 관용과 배려는 폭언과 폄훼로 돌아왔다. 더는 피할 수 없다. 한국당은 당장 객관적인 진상조사위 구성과 조속한 정상가동에 협조하라. 민주당은 더 이상 진상조사위 구성을 망키지 말라.

필자에게 5·18은 여전히 읽히고 통스러운 텍스트다. 매년 5월마다 피울음과 분노, 아픔, 고통이 새싹처럼 돌아난다. 분명히 말하건대, 5·18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민중이 겪은 역사적 고통과 좌절이다. 그러나 5월 광주시민이 목숨 바쳐 이룩한 생명공동체의 빛나는 성취와 일치하지 않는 한, 광주의 아픔은 멈출 수 없다.

끝나지 않는 우리 모두의 고통, 그래서 5·18은 현재다.

社說

황교안 대표가 망월동에 오기 전 해야 할 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월 영령들이 잠든 망월동 국립묘지에서 열리는 5·18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한다. 제1야당 대표로서 국가보훈처의 초청을 받았으니 얼굴을 내밀겠다는 것이다. 과연 법륜가 출신다운 말이다. 하지만 황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5·18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려면 그에 합당한 조치와 마음가짐을 갖는 게 순서일 것이다. 망월동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5·18 39주년 기념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 행사인가?

망월동은 80년 5월 영령들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이 잠든 민주열사묘이다. 그리고 5·18 39주년 기념식은 그분들의 넋을 기리고 회생을 추모하는 엄숙한 의식이다. 이처럼 성스러운 의례 장소에 비록 신분이 높다고 아무나 발을 딛을 수는 없다. 우리민족은 고래(古來)로부터 제례에 참석하려면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추모대상에 대해 공경을 다하는 풍습을 지켜오고 있다. 설사 직분이 높다 하더라도 추모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라면 발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황 대표와 그가 속한 자유한국당은

5·18과 오월영령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황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5·18 목욕을 금지토록 훈령을 개정했던 장본인이다. 그리고 한국당 3인방은 5·18을 북한 특수군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오월유가족을 괴물집단으로 서슴치 않고 매도하는 행태를 보인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가보훈처의 초청을 받았으니 얼굴을 내밀겠다는 것은 너무나 물음치한 처신이다.

만일 황 대표가 진심으로 80년 5월 영령들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이 우리란다면 기꺼이 망월동으로 오시라. 대신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오는 게 옳다.

황 대표는 지금이라도 망언의 의원에 대한 확실한 퇴출,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 조건 없는 진상조사위 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5월 영령들과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5·18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능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광주에서 '소란'을 일으켜 정치적 반사이득을 얻겠다는 일박한 '상술정치'는 이제 버려야 한다.

'광주 대표음식 7선' 외지인 기호 잘 살려야

광주는 전국에 맛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막상 유명한 음식을 꼽으려면 딱히 내세울 게 없다.

그나마 한정식이 외지인들에게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언급되는 정도다.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 종종 회자되곤 한다.

그렇다면 왜 광주는 미향(味鄉)이라 불리면서도 대표음식이 없는 것일까? 그것은 한정식 등 보편적인 음식맛이 뛰어난 뿐 시대적 기호에 맞는 차별성 있는 음식을 개발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음식은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요소이다. 또한 지역을 홍보할 때 가장 효과적인 연상물이 된다.

따라서 광주만의 특별함을 담은 대표음식 개발은 지역마케팅의 전략 차원에서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광주대표음식으로 광주한정식, 광주오리탕, 광주주먹밥, 광주삼추튀김, 광주육전, 무등산보리밥, 광주송정리떡갈비 등 7개 음식을 선정해 주목된다.

시는 이 중 ▲'상징성' 광주주먹밥 ▲'차별성' 광주삼추튀김 ▲'대중성' 무등산보리밥 등 3개 부문의 대표 음식을 각각 1개씩 선정, 미래

전략 음식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광주음식 공모전과 스토리 공모전을 통해 추천된 음식을 광주대표음식 선정위원회에서 광주대표음식 후보음식군으로 9개 음식을 선정하고 100인 토론회를 거쳐 3개(상징성, 차별성, 대중성) 부문의 음식을 최종 확정했다.

광주시는 이를 반영해 오는 6월부터 광주 대표음식 브랜드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조리법을 개발해 표준화 및 다양화하고, 시민들과 함께 광주맛집을 선정해 광주대표음식 브랜드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홍보·기획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음식 브랜드화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정된 음식들이 외지인들의 기호와 취향과 맞아 떨어져야 한다. 피자, 스파게티, 스키와 같이 이미 세계적으로 대중화된 음식들을 보면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그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이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본고장의 맛 (authentic)'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심리가 직접 본고장을 찾게 만들고 결국 해당 지역의 관련 산업에 활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픽 뉴스

500대 기업중 38곳 '물갈이'...SK하이닉스·GS칼텍스 '톱10'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38개사가 교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톱10'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선두 자리를 유지한 가운데 포스코와 LG전자가 3, 4위 자리를 맞바꿨고, SK하이닉스와 GS칼텍스는 순위권에 새로 진입했다.

1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500대 기업을 선정해 결과 총 38곳이 새로 진입한 동시에 같은 숫자만큼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대 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2천835조2천683억원으로 전년보다 2.1%(57조8천881억원)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0.01%(116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별 순위는 삼성전자가 매출 243조7천714억원으로 단연 1위였다. 이어 현대차와 포스코, LG전자, 한국전력공사, 기아차, (주)한화, SK하이닉스, GS칼텍스, 현대모비스 등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포스코가 한계단 오른 반면 LG전자는 한계단 내리며 3.4위 순위를 서로 주고받았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와 매출이 20%나 늘어난 GS칼텍스는 각각 5계단과 3계단 오르면서 새로 10위권에 들었다. 업종별로는 500대 기업 명단에 석유화학 업체가 49개나 포함돼 가장 많았고 ▲유통(47곳) ▲자동차·부품(46곳) ▲건설·건설자재(43곳) ▲보험(33곳) ▲IT·전기전자(32곳)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烈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9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정정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화부 650-2067 지역특집부 650-2060 체육부 650-2065 안전부 650-2080 서설실 650-2006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광고국 650-2072 경영지원국 650-2010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현장칼럼



배미경

호남대학교 초빙교수·더킹핀 대표

유니버+시티:부산시와 대학의 상생전략에서 배우자

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까지 할 정도로 대학의 지역사회 참여, 지역 사회 상생발전의 문제는 미래 대학과 도시가 마주하고 있는 이슈다.

최근 부산시가 체계적으로 대학과 도시 상생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어 주목받고 있다. 부산광역시 지난 해 초 '부산지역 대학 및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대학 현황 파악은 물론이고 지자체 실무자와 대학 실무자들의 요구사항을 분석, 시-대학 상생협력 모델 창출을 위한 기초조사를 마쳤다. 올 1월 부산광역시 조직개발을 통해 성장전략본부에 시산학협력단을 신설했다. 지역 대학에서 6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총 10명 규모로 대 학협력담당 조직이 시에 꾸러졌고, 지역의 대학들도 시와의 협력을 위해 카운터파트너 역할을 담당할 조직을 정비했다. 거점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의 경우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전담조직인 지역혁신협력팀을 신설해 부산시의 카운터파트너로 일할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부산시산학협력단이 내놓은 첫 사업은 2019지역사회상생협력 지원사업 공모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사업의 골자는 부산지역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시-대학 상

생협력 모델을 발굴·지원한다. 부산 지역 24개 대학교가 공모대상인 이 사업은 4억 원의 예산을 우선 책정하고 지역 내 공공기관, 자치구·군, 지역 민간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 협업하는 '컨소시엄형'과, 대학 단독으로 특성화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특화형'으로 대학이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했다. 중점과제는 지역 봉사, 지역문화 선도, 평생 교육 제공, 지역현안 해결, 미래세대 육성 등이다. 부산광역시는 오는 5월 말경 선정대학을 확정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부산시가 지역사회 혁신의 파트너 대학을 선택한 것은 명견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을 지역혁신의 상생파트너로 본다는 적어도 3가지 의의가 자리한다. 첫째, 대학은 존재 그 자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광주만 해도 17개 대학에 전체 인구의 약 10%가 대학생이다. 인구 유입효과와 이들이 먹고 자는 데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둘째, 지역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업지원의 핵심창구가 대학이다. 기술개발과 인건, 정부지원, 자본의 투자, 지역 산업계를 지원하는 인력의 공급부로서 대학이 지역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지대하다. 마지막으로 대학이

가진 문화적 자산의 역할이다. 지역사회 열린 대학은 공연, 전시, 문화행사, 컨벤션,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문화자원의 공급처다. 그동안 대학을 교육부 등 중앙의 일로 여겨왔던 한국의 문화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파트너로 관심을 가진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 자체가 혁신적이다.

앞서 언급한 책 '유니버+시티Univer+City: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에서는 도시와 대학 상생문제의 걸림돌로 의식, 리더십, 예산의 문제를 지적했다. 부산광역시는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모두 해결한 첫 사례라 기대가 크다. 조직과 예산을 확보했고, 시와 대학 간 상생협력단이라는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실행중심체제를 완비했다. 또한 대학총장 경험을 가진 시장의 리더십이 대학과 도시의 상생 정책에 힘을 더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대학이 가진 경제적 가치, 교육적 가치, 대학이 가진 인적 물적 인프라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지역혁신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부산의 앞선 생각은 그 자체로 성공적이다. 한편으로는 마냥 부럽다. 17개 대학도시 광주가 부산시의 이러한 변화에 자극을 받고 주목했으면 한다.

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동차 등록 대수 2천100만대를 넘은 시대에 난폭운전 등을 하여 도로의 무법자가 절대 돼서는 안 되고 교통법규 준수 안전운행을 하여 교통질서가 확립되고 교통사고 발생 국 1위라는 오명을 빨리 벗어나야 하며 관광객들이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교통문화가 개선 발전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한다. /진병진·여수경찰서 삼일파출소

독자투고

화물차 법규준수 안전운행을

요즘 각종 건축 현장이 많아 도로에는 많은 화물차들이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부 화물차들의 운전자가 과속, 과적, 난폭 운전 등을 일삼고 있다.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계 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짧은 시간에 많은 눈물을 흘리겠다는 사고 방식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되겠다.

화물차들의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면 좁은 도로에서 무서운 속도로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는 모습, 유별난 난폭운전으로 전복될 뻔한 사례, 과적으로 흩어 도로에 떨어져 도로 미관을 해치고, 다른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형승용차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운전 중 위험을 느끼는 경우 등이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